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김기식 소장, 박선나 연구원

(재)더미래연구소

<논의에 들어가기 전, 입시 용어 정리>

현행 대학입시전형은 크게 ‘수시’ 와 ‘정시’ 로 나뉜다.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이 중심이 되는 반면, 수시는 1997학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학생부전형이 수시모집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별 논술고사 역시 수시모집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부터 수시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와 현재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의 73.7%를 수시 모집에서 선발한다. 이명박 정부부터 대학 자율화의 기치아래 대학별 전형이 다양화되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을 통해 다시 전형을 간소화했다. 아래 <표 1>에서 보듯, 현행 수시모집 중 단순히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것을 ‘학생부교과전형’ 이라고 부르며, ‘학생부종합전형’ 은 내신 성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 기록을 보는 전형으로 이 두 전형을 통칭하여 ‘학생부전형’ 으로 일컫는다.

<표 1> 2018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대입전형 (단위: %)

구분	전형 유형	수시 내 구성비	비율	구분	전형 유형	정시 내 구성비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54.3	40	정시	수능 위주	86.7	22.8
	학생부종합	32	23.6		실기 위주	12.2	3.2
	논술 위주	5.1	3.7		학생부교과	0.5	0.1
	실기 위주	7.1	5.3		학생부종합	0.5	0.1
	기타	1.5	1.1		기타	0.1	0
	소계	100	73.7		소계	100	26.3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4.27.). 대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1. 서론

-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작년 8월,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추진을 근간으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논란 끝에 1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절대평가안 그 자체에 대한 논란과 함께, 대입 전형 전반의 구조 변화 없이 단지 수능 개편만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새로운 입시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반년이 남은 시점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늦어도 6월까지의 가안이 발표되어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는 것 외에도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대입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대입 개편을 논의함에 있어 현재 일부 대학 입학관계자 및 교육단체와 여론의 인식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1) 확대된 수시모집 유지 여부와 2) 수시모집 내 학생부종합(학종) 전형¹⁾ 유지 여부이다.

1) 수시·정시비율

- 다수의 교육계 인사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같은 교육단체는 현재 수준의 확대된 수시모집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시 축소를 반대한다. 과거 사교육 발생 원인이 수능 준비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정시 선발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사교육을 확대시키며,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다. 또한 문제풀기에 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 아니며,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은 수시모집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시모집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반면, 정시전형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수시 축소를 반대한다.
- 반면,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자유한국당 모두 수시 축소·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수시모집 확대가 1인당 사교육비를 감소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시모집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비교과전형을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만 유리할 뿐, 학생부종합전형 등 그 밖의 전형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고, 특히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시전형을 통해 특목고·자사고 출신을

1) 수시모집에서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2015학년도부터 실시)은 기존 입학사정관제(2009학년도부터 실시)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내신 성적을 포함하여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 기록이 중시됨. 학교 외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음. 입학사정관제 하에서는 대학의 인재상 및 전공적합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었으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화하면서 고교과정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내신, 동아리, 태도 등) 여부가 중요하게 됨.

(베리타스알파. (2015.7.1.).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84>)

대거 선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수시모집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은 대표적 감각이 전형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이다. 그 밖에도 정시가 축소되고 수시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고3 학년말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일반고에서는 입학하자마자 수능 포기자가 양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수시 축소를 주장한다.

2) 학생부종합(학종)전형 유지

- 상당수의 대학 입학관계자 및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 진로지도교사들은 수시모집 중에서도 학종전형을 축소·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학종전형은 대입 선발도구를 다양화시켰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대입기회를 확대했으며, 오히려 학생부 기록을 책임지는 교사의 권한이 강화되어 학교의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²⁾” 한다는 것이다.
- 반면 여론은 다수가 학종전형에 부정적이다. 작년에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³⁾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는 ‘학종전형은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하며(응답자 75.1%), 합격기준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감각이 전형(응답자 77.6%)이고, 불공정한 전형(응답자 74.8%)’ 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이 무엇이나’ 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학종전형을 압도적인 1순위로 꼽았다.⁴⁾
-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종전형이 교육현장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학종전형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는 비교과영역 반영을 대폭 축소하고, 주요대학 학종 선발비율을 1/3이하로 규제하는 방안” 이 핵심이다.⁵⁾ 그 밖에도 대입 전형과 관련하여 수시와 정시 지원시기를 일치시켜 고3 학기말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의 대입 지원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 본 보고서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대입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종전형에 대한 보다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합뉴스. (2016.6.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5/0200000000AKR20160615132851004.HTML>

3) 송기석 의원-(주)한국리서치 주관 2017년 5월 실시, 표본 1,022명(95% 신뢰수준, 표집오차 ±3.1%)

4) 동아일보 주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진학사 도움 2016년 7월 실시, 표본 1,173명(고교생 275명,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51명, 고교교사 747명)

5)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2.6.).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기 위한 ‘대수술’ 제안

2. 실패한 역대 대입정책

- 역대 정부는 사교육비 축소 및 공교육 강화를 공통의 대입정책 목표로 삼았다. 수능에 의한 선발 비중을 축소시켜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학생부를 중심으로 대입 선발 비중을 늘려 공교육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학 자율화를 통해 대학마다 전형 방식을 다양화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축소” 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수능에 의한 정시 선발 비율이 전체 모집인원의 70%가 넘었다. 따라서 수능 비중을 축소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 중심의 대학 입시 선발을 유도하는 방식⁶⁾” 으로 공교육 강화를 꾀했다.
 - 이명박 정부도 정시모집을 축소하고, 내신 중심의 수시모집 비중을 확대시켰다. 그 가운데 대학 자율화를 통해 학교마다 전형을 다양하게 했다. 또한 당시 학생의 능력은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교육적 가치문제가 제기 되었고, 내신만으로 변별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대학의 요구가 쏟아져 내신 외 다양한 평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했다.
 - 박근혜 정부도 정시모집 비중을 축소하고 수시모집 비중을 더욱 확대시켰다. 기존 수시모집의 입학사정관제를 학종전형으로 수정·발전시켜, 학종전형에 의한 선발 비중도 확대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으로 대입 전형이 과도하게 다양·복잡해지자, 대입전형 간소화 대책⁷⁾을 정부 출범 후 첫 교육정책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표 2>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입정책 핵심

대입 정책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현안	수능, 논술, 내신 3중 부담에 대한 완화요구, 사교육비 경감 요구	사교육비 경감 요구	대입전형 간소화 요구
핵심 목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축소	사교육비 축소 및 대학 자율화	학교교육 정상화 및 대입전형 간소화
수능	- 수능등급제(1~9등급) 도입 및 적용 - EBS 인터넷 수능 강의 활용	- 수능과목 축소 및 수준별 수능 도입 (A·B형) - 수능-EBS 연계 강화(70%수준까지)	- 정시 전형 축소 및 수준별 수능 폐지 - 수능-EBS 연계 유지(70%수준까지) -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생부전형	학생부 비중 확대 및 입학사정관제 도입	학생부 비중 유지 및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 전형 중심 수시 확대
공통적 결과	학생부 반영비중 증가(수능 및 논술 비중 축소), 대입 복잡성 증대 및 공정성 악화, 사교육비 경감 효과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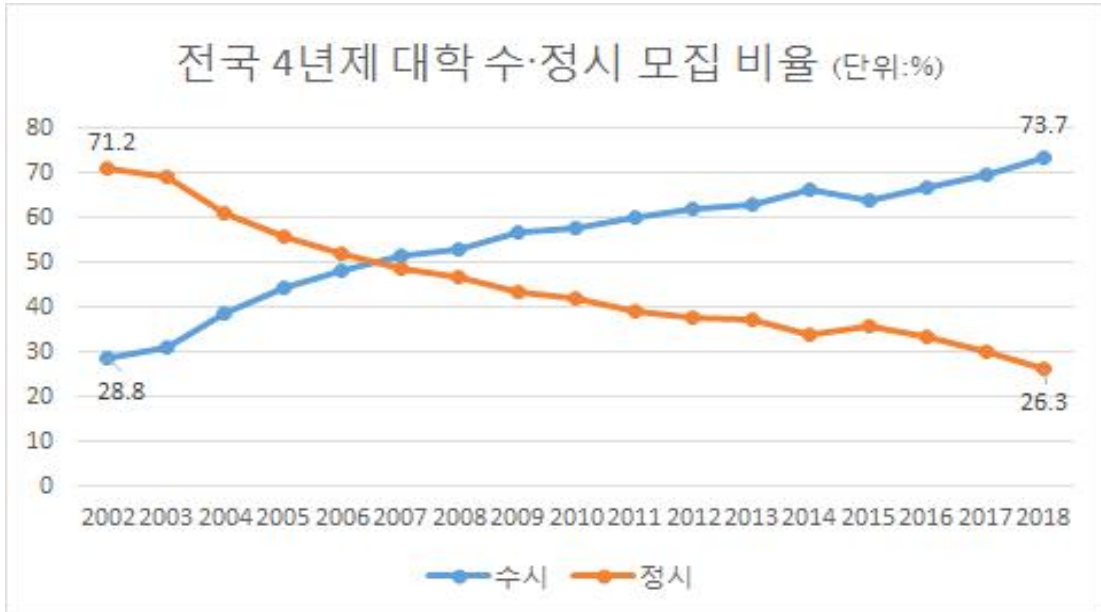
<출처> 안선희. (2017). 2021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종합 개선 방안 탐색 참고 요약 및 재가공

6) 백우정·최종덕. (2011). 시스템사고를 통한 사교육비경감정책 평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7) 기존 수시 최대 12개, 정시 최대 10개 전형이었던 것을, '15, '16학년도부터는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 전형 방법 적용

- 역대 정부의 대입 정책의 결과,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2002학년도 28.8%에서 2018학년도 73.7%로 약 45%p 상승한 반면, 정시모집 비율은 같은 시기 71.2%에서 26.3%로 줄어들었다.

<그림 1> 학년도별 전국 4년제 대학 수·정시모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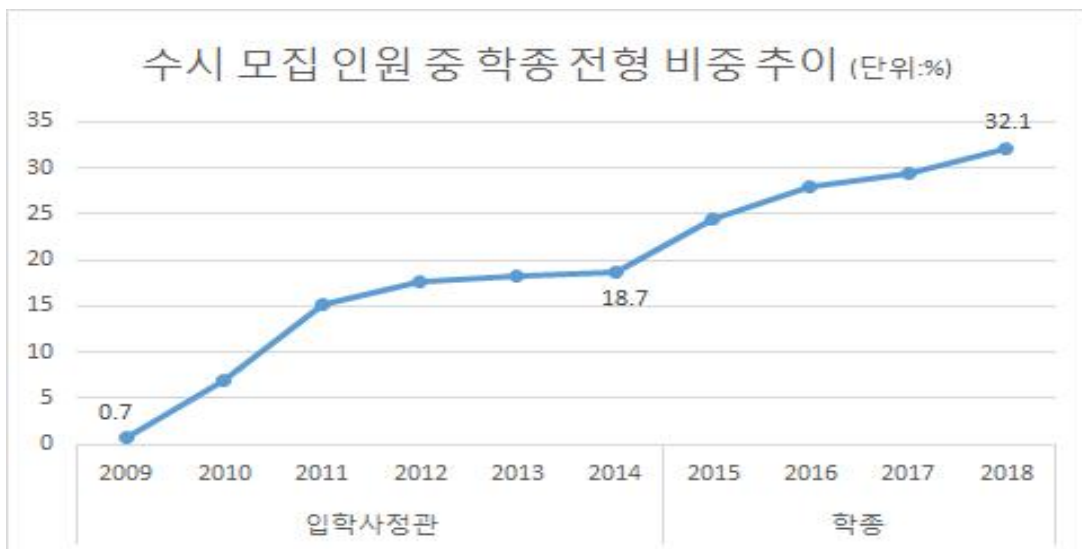


※ 2018학년도 정시 선발 26.3% 중 수능에 의한 선발 22.8%에 해당

<출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 시행계획

- 또한 수시 모집 인원 중 학종전형의 근간이 된 입학사정관전형의 비중은 2009학년도 0.7% 비중에서 2014학년도 18.7%로 증가했고, 2015학년도부터 학종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18학년도 32.1% 비중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었다.⁸⁾

<그림 2> 학년도별 수시 모집 인원 중 학종전형 모집인원 추이 (단위: %)



<출처>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차정민. (2016).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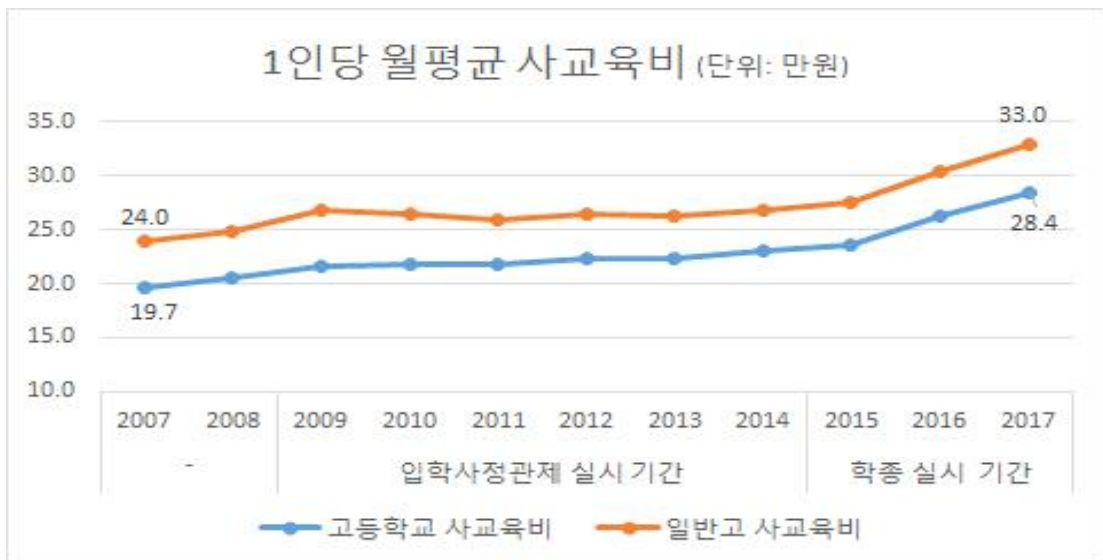
8)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2.6.).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기 위한 '대수술' 제안

-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의 대입정책은 1. 사교육비 경감에 실패했고, 2. 공교육 강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 입시 전형은 더 복잡해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1. 사교육 유발의 주된 요소라고 비판된 수능에 의한 선발비중을 축소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 사교육비 통계가 2007년부터 집계되었기 때문에, 정시모집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전 시기와 비교는 어렵지만, 정시모집이 축소되고 수시모집이 확대되어온 지난 10년 간 전체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수시선발비율이 전체 모집인원의 50%수준이었던 2007년의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9.7만원 대였는데, 수시모집이 70%수준으로 확대된 2017년에는 오히려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28.4만원으로 8만원 이상 올랐다. 대입을 준비하는 일반고등학교(특성화고 제외) 학생들의 사교육비도 2007년 24만원 수준에서 2017년 33만원 수준으로 9만원 이상 올랐다.
- 특히 2015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학종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학생부기록이 대입 평가요소로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학생부에 교외 활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다. 일반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5년 27만원 수준에서 2017년 33만원으로 약 6만원 가량 증가했다.

<그림 3> 연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2007년부터 조사되어 이전 자료 부재.

<출처> 통계청 매해 사교육비조사 결과, e-나라지표

- 작년 초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은혜 의원실이 공동 실시한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이 가장 많이 유발되는 전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생·학부모·교

사 모두 학종전형을 1순위로, 논술을 2순위로 꼽았다.⁹⁾ 모두 교내에서만 준비하기 어려운 사교육 유발 전형으로 수시모집에 포함되는 전형들이다.

- 수능에 의한 선발을 축소할 것이 역으로 사교육을 늘렸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수험생의 공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능 필수과목을 점점 줄여왔고 EBS-수능 70% 연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없는 이유는 정시모집의 비중이 과거 70%대 수준에서 현재 20%대 수준으로 줄어 그 효과가 반감되었기 때문이다.

2. 대입에서 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 선발을 늘려왔지만, 공교육은 강화되지 않았다.

- 학생부에 의한 대입 선발 비중이 확대되어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그러한 교실의 변화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지 확인할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¹⁰⁾ 다수의 교사들은 학종전형 이후 학생부기록이 대입에 활용되면서 교사가 객관적으로 학생기록부를 작성할 수 없게 만들어 오히려 교사의 부담이 커졌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한다.
- 수시모집에서 비교과활동이 반영되는 학종전형이 확대된 후로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좋은 소수의 전교 순위권 학생들에게만 비교과활동의 기회를 몰아주는 등 교내 차별문제도 발생했다.
- 또한 수시모집에 의한 선발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거의 모든 학생이 수시모집 준비를 학기말에 하게 됐다. 수시모집이 고3 9월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고등학교 학기말 정상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여 고교 운영체제가 6학기가 아닌 5학기 체제화 됐다는 비판도 있다.

3. 대학 자율화로 입시 전형이 다양화되어 오늘날 대입 전형은 매우 복잡하다.

- 박근혜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보다는 전형이 간소화됐으나, 같은 전형도 학교마다 전형을 일컫는 명칭과 시기 등이 다르다보니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복잡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고교의 담임선생님은 물론이고, 진로교사들조차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해줄 수 없고, 그 결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입시 컨설팅 기관에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실정이다.
- **무엇보다 현 대입 체제는 불공정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특히 학종전형이 공정성 논란의 중심이다.**
 - 불공정의 첫 번째 근거는 대입 모집 전형 중 합격기준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감감이 전형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 수시모집의 학종전형과 논술전형이 그 예다. 현재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의 약 30%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유은혜의월실 보도자료. (2017.2.10.).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결과 발표

10) 이현. (2018.3). 비공개문건 학종현황 정리 참고

가 학종과 논술전형에 의해 선발된다. 서울대는 수시모집을 100% 학종전형으로, 서울 소재 상위권 15개 대학은 수시모집의 57%를 학종과 논술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종은 내신 성적을 제외하고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에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 내부적으로 이를 정량화시켜 합격자를 선발하더라도, 응시자에 합격기준과 이유를 제시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논술전형도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에 어느 부분에서 가점과 감점이 발생했는지 채점표를 공개하는 학교는 없다.

- 둘째는 현재의 대입 전형이 특목고·자사고 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의 불공정성이다.
 - 대표적으로 서울대 사례를 보면, 서울대는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이 유리하다는 정시모집을 축소하고, 수시 모집 인원을 확대했다.¹¹⁾ 2018학년도 기준 전체 모집 인원의 74.7%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했고, 수시모집 인원 전체를 ‘학종’으로 선발했다. 수시모집 유형은 지역균형, 기회균형 I, 일반전형으로 나뉘지며, 지역균형은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지원가능한 전형으로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되며, 특목고 학생은 선발된 적이 없다. 기회균형은 저소득가구, 농어촌 학생, 농생명계열 고교 학생들만 지원가능하고, 이 역시도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된다. 일반전형은 기존의 특기자전형이 폐지되고 2013학년도부터 시행되어, 말그대로 일반 학생들의 수시모집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다. 현재 수시 인원의 약 67%를 일반전형에서 뽑는다.
 - 아래 <표 3-Table (1)>은 지역균형·기회균형 I·일반전형 모두를 포함한 수시 합격자 현황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주로 사용된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2,572명 중 53.6%에 해당하는 1,379명이 일반고 출신이고, 45.2%에 해당하는 1,162명이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이었다.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 수가 전국 고등학생의 약 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고에 비해 매우 높은 합격률이지만, 결과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더 많이 입학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쭙피 일반고만 선발하는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I 을 제외한 일반전형 합격생만을 보면(<표 3-Table (2)>),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생 1,74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1,095명으로 전체 62.9% 비중을 차지한 반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620명으로 35.6% 비중을 차지했다. 더구나 최근으로 올수록 일반고 합격생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3학년도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중은 39.5%였으나 현재 35.6%로 약 4%p수준 줄어든 반면,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자 비중은 그만큼 증가했다.

11) 12년 전인 2006학년도 서울대의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이 전체 인원의 38%수준에 불과했었지만, 2018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의 약 75%를 수시 모집을 통해 학생을 선발

<표 3> 2013-2018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자 고교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Table (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시 합격자	2,680	2,684	2,408	2,450	2,434	2,572
특목고·자사고	1,100 (41%)	1,320 (49.2%)	1,083 (45%)	1,084 (44.2%)	1,129 (46.4%)	1,162 (45.2%)
일반고	1,545 (57.6%)	1,323 (49.3%)	1,294 (53.7%)	1,334 (54.4%)	1,276 (52.4%)	1,379 (53.6%)

Table (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시 합격자 중 일반전형 합격자	1,764	1,833	1,683	1,689	1,673	1,742
특목고·자사고	1,035 (58.7%)	1,255 (68.5%)	1,037 (61.6%)	1,021 (60.4%)	1,075 (64.3%)	1,095 (62.9%)
일반고	697 (39.5%)	540 (29.5%)	619 (36.8%)	639 (37.8%)	573 (34.2%)	620 (35.6%)

* 빨간색-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표시, 파란색-낮은 비중. 특목고는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체능고 포함. 일반적으로 일반고로 인식되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일반고 통계에 포함함.

** 전체인원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 합격자를 뺀 나머지는 검정고시, 특성화고, 외국고 합격자임

<출처> 서울대학교 각 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발결과 보도자료

- 서울대의 수시모집 확대가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학생부교과 전형 확대였다면 애초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아무도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신 상대평가제도 하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종 전형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수시에서도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서울대 외에 다른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¹²⁾도 전체 모집 인원 중 71.2%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데 43.3%를 학종 전형으로 선발했다. 논술로 14.5%를 선발하고, 학생부교과 전형은 6.8%에 그쳤다.
- 이현(2017) 자료¹³⁾에 따르면, 학종 평가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학생 1인당 연 평균 73만원 투입되는 반면, 일반 공립고의 경우 6만 5천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교육비 투입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학종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명을 입고, 고교 등급제를 더욱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고 내에서도 기회의 균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앞서 언급했듯이, 학종전형은 일반고교 내에서도 차별을 유발한다. 일반고에서는 비교과활동의 기회를 소수의 전교 순위권 학생들에게 몰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신 성적이 학종전형에서도 기본 반영 요소이기 때문에, 명문대 합격확률이 높은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2)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서울시교육청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중 p.16 대교협 자료 참고)

13) 이현. (2017). 대입개편 5종 세트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론문.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

- **역대 대입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입단순화,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시전형 개선, 수능의 절대평가화 등을 약속했다.**¹⁴⁾ 각각은 시행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야기했다.
 - 대통령은 대입 단순화를 위해 전형을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¹⁵⁾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학종전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수험생 및 학부모와 대학 입학관계자 및 교육단체 간 입장이 달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또한 대통령은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약속했다. 역대 정책에서 수시 비중을 점차 확대해왔음에도 그러한 정책이 사교육비를 통제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과 같은 교육단체는 정시 확대가 종전과 같이 수능 사교육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¹⁶⁾하고 있다.
 - 또 다른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제는 수시모집 축소(곧, 정시 확대)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정시가 확대된다 해도 근본적으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작년 8월 교육부는 수능 개편 시안에서 1안으로 부분적 절대평가 전환(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유지/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제2외국어 절대평가)을, 2안으로 전면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했지만, 두 안 모두 공감대를 얻지 못해 유예됐다.
 - 1안은 상대평가 과목에 쏠림학습이 일어남과 동시에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추가로 학습부담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 실시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 결국 논술 등 대학별고사 실시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는 과거 2008학년도 대입 전형처럼 수능과 내신성적 외 대학별고사인 논술까지 합산 반영하는 방식이 되어 아이들을 다시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몰고 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4)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최종본

15) 인터넷 수능신문. (2017.3.22.). <https://goo.gl/6HvLEB>

16) 베리타스알파. (2017.3.28.).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93>

3. 대입개편안 도입 기본전제와 파급효과

-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확실한 두 가지 변화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실시와 고교학점제 실시이다.

1. 문·이과 통합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 도입 취지 및 개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은 고교체제에서 문·이과 구분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나아가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문·이과 구별 없이 통섭적으로 사고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존 2009 교육과정은 명목상 모든 과정이 선택교육과정이었지만, 수능에서 문·이과 과목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결국 문과는 문과과목만, 이과는 이과과목만 공부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고1 수준에서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배우고,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반선택·심화선택과목을 택할 수 있다.
- 과제: 2009 교육과정의 교훈에 비추보면,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수능 개편안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 수학 난이도는 현재 수준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해도 대학입시에 반영될 내신과 수능에서 수학의 난이도가 현재와 같이 어려운 수준을 유지하는 한 수포자를 막을 길이 없고, 대학 진학 시 이공계진학을 기피하는 현상도 계속될 것이다.¹⁷⁾

2. 고교학점제

- 도입 취지: ‘기존의 표준화된 인재상을 목표로 한 획일적인 교육 패러다임¹⁸⁾’을 탈피하고, 학생들이 관심사와 진로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 계획안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18년 100개의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2022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병행되어야 한다.

1) 첫째, 내신에 있어서 절대평가가 불가피하다.

-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관심사 및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신에 있어서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선택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 소수가 선택한 과목을 피해서, 소위 점수를 잘 따기 위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물리와 같이 어려운 과목들, 심화과정 과목들은 개설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어 학내 ‘다양한 교육’

17) 김기식·박선나. (2018).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 더미래연구소. p.14

18) 교육부. (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상대평가는 교내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협력적 면학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기도 하는 한편, 학생의 성취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시험 난이도 조절을 못해 동점자 수가 많아 등급 당 비율을 초과하면 모두 그 아래 등급을 받게 되는 모순이 벌어진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A(1)등급을 성취한 학생이 없음에도 반드시 일정 비율을 배당해야하므로 교사의 평가권도 침해되는 일이다.¹⁹⁾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 하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절대평가가 실시되면 한국 특유의 ‘온정주의와 대입 실적 만들기를 위한 성적퍼주기’가 횡행할 것²⁰⁾이라는 우려다. 만약 대학의 입시과정에서 평가에 반영할 과목과 학생들이 선택한 심화과목의 가중치 정도를 모집단위별로 설정하게 하면 내신 절대평가 시스템을 갖추고도 학생들 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²¹⁾

2) 둘째, 내신의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시점인 2022년까지 특목고 및 자사고²²⁾의 폐지가 필요하다.

-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은 내신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내신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수능과 학종전형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실시되어 특목고와 자사고도 내신 절대평가제로 전환된다면, 더 이상 결점이 없는 특목고와 자사고로의 진학을 위해 더 많은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 특목고는 현재로서도 입시준비중심으로 운영되어 본래 설립·운영의 취지를 잃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고교체제에서부터 학교 서열화를 고착시켜왔다. 또한 특목고나 자사고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입시경쟁은 중학교, 초등학교로 점점 확대되었다. 입시 준비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면서 1인당 사교육비 부담도 대폭 증가하였다. 교육부 역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밝히는 계획안에서, 기존에 고교 유형 다양화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한 결과가 오히려 학교 간 서열화를 고착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반고 체제 내에서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해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국제고 및 자사고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²³⁾ 다만 교육부는 외교와 자사고의 경우 ‘재지정평가’를 통해 학교 운영을

19) 이범. (2017).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정책 비판과 대안. 더미래연구소 주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 발제자료 참고

20) 이범. (2018). IB와 중장기 교육개혁: 지방교육자치 시대 IB 도입의 의미

21) 구체적 설명은 다음 장인 입시제도개편 기본방향에서 서술

22) 현재 전국 자사고는 46곳, 외국어고 31곳, 국제고 7곳이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다. 서울에 자사고 23곳, 외국어고 중 6곳, 국제고 1곳이 있고, 경기도에는 자사고 2곳, 외교 8곳, 국제고 3곳이 있다.

23)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진로맞춤형 고교체제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외교·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가 공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어나가고 있어 일괄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 말 각 시도교육청에 이들 학교를 재지정을 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2019~2020년)추진을 요청한 상태다.²⁴⁾

- 그러나 수험생의 혼란을 장기간 발생시키지 않도록 외고·국제고 및 자사고 폐지는 올해 안에는 확정지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특목고를 가기위한 입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목고 폐지방침을 조기 확정하지 않게 될 경우 많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재정적 부담을, 학생들은 입시 부담을 가졌다가 진학할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라지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특목고·자사고 폐지 방침은 5~6년 전에 조기 확정되어야 한다.
 - 또한 학종전형이 폐지되는 등 앞으로 대학 입시제도 변화로 기존 특목고와 자사고가 결코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학생들 스스로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할 동기가 약화될 것이고, 특목고 스스로도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곳이 등장할 것이다. 그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리하면,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와 난이도를 낮춰야 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신 절대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특히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폐지 의사 및 추진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24) 오마이뉴스. (2017.1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3542

4. 입시제도 개편 기본방향

- 입시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은 단순성, 공정성, 다양성, 고교교육정상화,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 무엇보다 현재의 대입 전형은 단순화되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 95% 이상이 찬성²⁵⁾하는 대입 개편의 제1의 원칙이다.
 - 둘째,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회의 균등과 과정에서의 공정함을 느끼게 하는 대입 개편이 되어야 한다.
 - 셋째,
 - 1) 내신과 수능 중 어느 한쪽의 비율을 확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내신 전형, 수능 전형, 내신과 수능 모두를 보는 전형이 마련되어 입시 유형에 따른 다양성을 주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비율이 높아 처음부터 한쪽을 포기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을 망쳐 대학에 갈 수 없게 만들지 않고 자신의 장점대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2) 또한 선발에 필요한 반영 과목 및 가중치를 부여하는 심화 과목을 모집단위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전공에 맞게 과목 선택과 난이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 넷째,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고려하며 고교교육 정상화 목표와 괴리되지 않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객관식 문제 풀이 방식인 현행 수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점차 변모해 나가야 한다.
- 이러한 대입 기본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개편안으로서 학종전형을 폐지하고, 모든 대학이 <수능: 수능+내신: 내신>을 같은 비율(1:1:1)로 선발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 복잡한 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려면 학종전형을 폐지해야 한다.
 - 학교교육에 충실하여 내신이 강점인 학생들은 내신 전형으로,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수능 전형으로, 내신과 수능 양쪽 모두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 점수가 불리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신과 수능 모두를 반영하는 전형이 필요하다.
 -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후 내신과 수능 점수 중 자신이 유리한 전형으로 응시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수시와 정시 개념은 사라진다.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유은혜의원실 보도자료. (2017.2.10.).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결과 발표

- 수능과 내신이 모두 절대평가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점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수능과 내신과목 중 어떤 과목을 반영할지, 어떤 심화과목에 가중치를 둘지를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해진 사항은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함으로써 원활한 고교학점제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내신 시험 및 대학 입학시험을 어떻게 선진화할 수 있는지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객관식 문제 풀이 학습 및 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쓰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충남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프로그램²⁶⁾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선진적 교육과정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력한 대체안이다.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입시만이 아니고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위와 같은 대입 개편안에 대해 1. 학종전형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전형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것이며, 2. 현행보다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고, 3. 과거처럼 점수에 의해 줄세우기 경쟁이 일어나게 유도하는 것은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이에 대한 반박은 아래와 같다.
 1. 학종전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현실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불공정 문제를 외면한 이상적 주장에 불과하다. 전형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위해 내신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고,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대학에서도 학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 앞서 언급되었듯, 학종전형 도입은 그동안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없었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대입에 반영되는 각종 비교과영역(창의적 체험활동, 소논문, 자격시험, 자기소개서 등)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사교육이 생겨나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교사가 객관적으로 학생부기록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교육을 왜곡시키기 까지 했다. 또한 대표적인 감감이 전형으로서 평가 기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 일각에서는 학종전형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생부종합 전형 개선 방안’에서 불공정 평가 기록에 대한 범

26) IB 프로그램(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은 1968년부터 교육과정 및 평가를 포함하여 개발된 교육체제이다. 스위스에 본부가 영국에 채점기관이 있으며, 전 세계 4,78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2020년 수능폐지 시점부터 전국 200개 공립학교에 IB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고사와 전혀 다르다. 과목이 정해져있어서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크고, IB본부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출제·관리·채점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한 IB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의 제주교육 적용방안 중간보고회 자료집 발췌)

적 조치를 강화하고, 학생부 기록에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 이외의 기록을 제한하며, 소논문 및 인증시험 반영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는 주요 활동들이 입시의 평가 반영 요소로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게 동아리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대입 평가에 유리할 것만 같은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동아리가 급조되었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학부모가 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들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논란의 중심인 학종전형 폐지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2. 수능에 의한 정시 전형이 확대된다고 하여 사교육 시장이 더 확대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현행 체제는 수능에 의한 정시 선발이 22.8%(2018학년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1원칙이 된다면,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비율이 전체 33%고, 수능과 내신 모두를 반영하는 전형이 33%이므로, 수능 자체로만 보면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셈이다.
- 앞서 보았듯이(p.7) 정시선발비율이 전체 모집인원의 50%수준이었던 2007년의 고등학생 월 평균 사교육비는 19.7만원 대였는데, 수시가 확대되면서 정시비율이 30%이하로 줄어든 2017년에는 사교육비가 오히려 28.4만원으로 8만원 이상 올랐다. 따라서 정시확대가 이루어지면 지금 체제보다 사교육을 더 유발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3. 수시축소·학종폐지가 수능 비중 강화로 이어져, 과거처럼 점수에 의한 줄세우기 경쟁을 유도해서 퇴행적이라는 비판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 현재도 모든 입시전형에서 줄세우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평가요소가 반영되던 학종전형에서도 줄세우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고교서열화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매년 1인당 사교육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는 경쟁의 양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재의 입시제도가 줄세우기 경쟁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나아가 입시경쟁을 단지 대입제도 개편에 의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 발상이다. 고용시장에서의 차별, 대학서열화에 따른 사회적 차별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제도 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입시제도를 개편하는 것의 목표는 불가피한 경쟁 속에서 과정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타당하다.
- 올해 당장 입시 개편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는 6월 이전에 입시개편시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입시제도의 특성상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최종본
- 백우정·최종덕. (2011). 시스템사고를 통한 사교육비경감정책 평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유은혜의원실 보도자료. (2017.2.10.).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결과 발표
-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2.6.).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기 위한 '대수술' 제안
- 이범. (2017).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정책 비판과 대안. 더미래연구소 주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 발제자료 참고
- 이범. (2018). IB와 중장기 교육개혁: 지방교육자치 시대 IB 도입의 의미
- 이현. (2017). 대입개편 5종 세트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론문.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
- 이현. (2018.3). 비공개문건 학종현황 정리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IB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의 제주교육 적용방안 중간보고회 자료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4.27.). 대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인터넷 언론기사]

- 베리타스알파. (2015.7.1.).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84>
- 베리타스알파. (2017.3.28.).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93>
- 연합뉴스. (2016.6.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5/0200000000AKR20160615132851004.HTML>
- 오마이뉴스. (2017.1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3542
- 인터넷 수능신문. (2017.3.22.). <https://goo.gl/6HvLEB>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8-03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발행일 2018. 3. 28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정세현)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18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 를 만들어 가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 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3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2030
